

“국민불신 없애라”... 예산·인력 늘려 안전사고 근절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

인력 1400명 증원·예산 5% ↑
안전관리 기관 32개서 97개로
사망사고 업체 입찰 제한 강화

지난해 말 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 누수사고와 KTX 강릉선 탈선, 서부발전 청년노동자 사망사고 등 공공기관에서 잇단 대형사고가 커지자 공공기관 안전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혀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지난 3월 19일 발표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으로 안전인원 확충과 예산 확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안전관리 중점기관을 기존



지난해 12월 11일 KTX 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했던 강원 강릉시 운산동 사고현장에서 사고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32개에서 97개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안전 관련 업무 전담조직을 기관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노동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기구인 안전경영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안전관리 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는 안전경영 시스템 인증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정원을 협의할

때 시설안전과 재난 예방 등 안전 분야 필수 인력을 우선 늘릴 방침이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으로는 56개 공공기관에 1400여명의 안전인력을 증원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 전용과 추가경정 예산 등으로 안전 분야 투자도 전년도의 13조7000억원 보다 5% 이상 확대된다. 안전 예산 확대를 위한 예산 편성 지

침을 개정하고 관련 내용을 중장기 재무 관리 계획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안전관리 책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등 사고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임원은 해임·해임건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영평가도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경영관리 부문 안전 지표는 최대 2점에서 6점으로 상향 조정되고 1명 이상 사망 등 중대 사고이거나 열 수송관 누수 사고처럼 현장 밖에서 발생한 중대 산업사고 등에 대해서는 안전법령·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모두 0점을 주기로 했다.

또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기관별 안전지표를 별도로 신설하고 안전투자로 생긴 부채는 경영평가 때 제외하기로 했다.

상습적인 안전 법령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심사 때 감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를 유발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건은 이전보다 더 강화됐다.

계약 과정에서 안전 관련 비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격심사 가격 평가’ 때 안전관리 비용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 안전진단, 시설물 개선 등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에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망자 수·재해율 등 주요 산업 재해 통계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공식 기준도 개정할 예정이다.

모든 공공기관은 위험 작업장의 경우 2인1조로 근무하도록 하고 신입직원은 현장 단독 작업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노동자가 위험 상황을 인지하면 발주자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대책에 담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4월 중 공공기관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경영 워크숍과 현장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안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R&D 2009억 투자

농진청 2020년부터 8년동안

농촌진흥청이 2020년부터 2027년까지 8년간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R&D)에 총 2009억원을 투자한다.

1일 농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8년도 제3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결과, 농진청이 요구한 ‘신농업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사업’이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사업이 문턱 높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농업 기후변화 이슈의 사회경제적 중요성과 시급히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현재 또는 미래의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확인해 유익한 기회로 활용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기후변화의 크기를 줄이는 농업부문의 노력이 선순환체계로 추진되도록 구성돼 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 전국 단위의 정밀 실측자료를 기반으로 단기 예측력을 높이고, 시장성과 지역특성을 고려해 기후와 계절성을 극복할 수 있는 작목배치와 작부체계 등 작물 재배기술과 가축 사양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세종=최신용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5~31일 미국에 파견한 시장개척단 참가자들이 로스앤젤레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美에 中企개척단 파견... 136건 수출 상담

중기중앙회 254만8000달러 규모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7일간 미국 뉴욕, 로스앤젤레스에 중소기업 12개사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현지 유력바이어와 1대1 수출상담회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뉴욕은 최근 5년간 화장품, 의류기기 위주로 한국 제품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로스앤젤레스는 한류의 영향으로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소비재 분야의 한국 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시장개척단을 통해 뉴욕에서 85건, 173만5000달러, 로스앤젤레스에서 51건, 81만3000달러 등 총 136건, 254만8000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면서 “이번 상담을 통해 향후 112만8000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장개척단 파견은 미·중 무역분쟁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 중국제품의 대체 수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승호 기자

중소 유관기관 2題

첫 행보는 전통시장... “현장과 소통할 것”

조보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취임

조보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취임 첫 날부터 전통시장을 찾아 애로를 경청하는 것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소진공은 조 신임 이사장이 1일 오전 대전의 공단본부에서 취임식을 마치고 인근에 있는 한민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대화를 하며 현장 애로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조 이사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공단이 존재하는 이유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그리고 전통시장이 있는 만큼 소상공인, 전통시장을 제일 앞에 두겠다”면서 “소상공인들이 매출을 확대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성장하고 고용을 확대해나가는 데 도움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보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대 이사장이 1일 대전 소진공 본부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조 이사장은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어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과 소통하겠다”면서 “소상공인도 만나고 전통시장에도 가겠다. 소상공인과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자”고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해나갈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다.

행시 30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에서 공공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조 이사장은 중기부의 초대 중소기업정책실장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즉각적인 문제해결 및 대책마련에 힘써왔다.

조 이사장은 “스스로 낮추면서 중기부, 관계기관, 단체와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정책을 현장에 실현시키고 현장의 이야기를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진공이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해 2014년 본격 출범, 5년째를 맞고 있지만 시너지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조직의 통합과 역량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창립 30주년’... 기보 “中企·벤처의 혁신성장 파트너로”

신규보증 65% 기술창업기업에

서른살을 맞은 기술보증기금이 ‘기술에 가치를 더하는 중소벤처기업의 No.1 혁신성장 파트너’가 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여기에는 기술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다양한 가치를 함께 창출해 나가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기술보증기금(기보)은 1일 부산 벡스코에서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 비전을

선포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윤모 이사장을 비롯해 기보 30년을 함께해 온 전·현직 임직원과 중소벤처기업인, 오거돈 부산시장, 국회 최인호 의원,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창립기념사에서 “기보의 기능과 역할에 걸맞는 변화를 추구하고자하는 의미에서 ‘기술금융지원’이라는 본원적 업무를 더욱 업그레이드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벤처혁신 종합지원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이사장은 “특히 매출 없는 기업, 저신용 기업임에도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경우엔 신규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성장의 디딤돌이 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기보는 신규보증의 65% 이상을 기술창업기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개방형 기술평가 플랫폼 기반도 구축해나간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기술평가전문기관으로서의 역량을 보다 강화해 기술시장 참여자들이 그 평가결과를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범위를 대폭 확장하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